

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

새누리의 진단

- 오랜 역사동안 우리 여성들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, 내조자로서 혼신의 역할을 하면서 희생의 삶을 살아왔음.
- 이제 여성들이 희생을 통해 일궈낸 것들을 사회에서 재충전하고,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지금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임.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대

새누리의 약속

-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
 -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 단계적 대폭 확대
 -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
 -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
 -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
- 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
 -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(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% → 70%)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
 -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 혜택 제공
 -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

새누리의 실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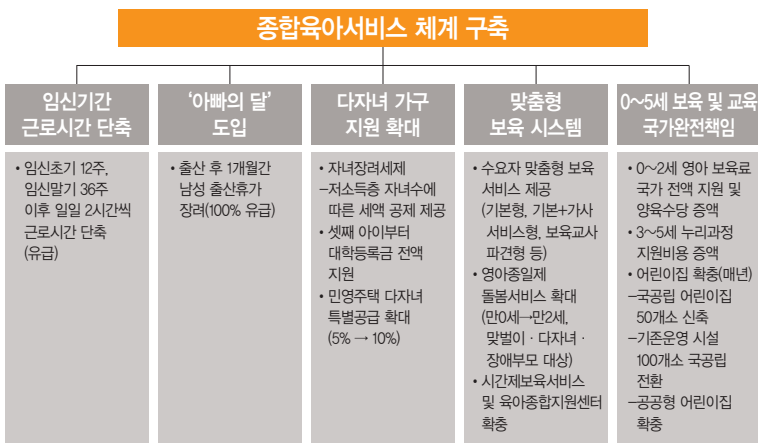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규칙 개정
- 여성인재 DB 구축을 위해 「여성발전기본법」 개정

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

새누리의 진단

- 출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종합육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

새누리의 약속



새누리의 실천

-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
- 자녀장려세제(새아기 장려금) 신설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
-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「아이돌봄지원법」 개정
-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

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 육아, 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경우 재취업의 문턱이 매우 높음.
-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경력단절 이전에 비해 직업 안정성이나 임금 수준이 열악한 근무 여건의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.
-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은 물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
 -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
 -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, 폴리텍대학, 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 제공
 -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직업상담, 다양한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

새누리의 실천

-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일하기센터 30개소씩 확대 예산 반영

임신과 출산 국가 부담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저출산·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속에서 이제 아이들은 개별 가정의 아이가 아닌, 우리의 아이, 대한민국의 아이로 사회 전체가 키우고 지원해야 함.
- 산모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은 물론 기저귀, 분유 값 등 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방안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임신·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
 -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
 -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
-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
-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
- 난임부부 체외수정·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
-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
- 고위험 임신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
- 고위험 임신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

새누리의 실천

-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

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

새누리의 진단

-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미비로 2차 피해 발생
-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 제고 필요
 - 2011년 피해자 지원 현황 : 심리적지원(42,290명, 57.2%), 수사·법적 지원(12,043명, 16.3%), 의료지원(1,138명, 7.7%)

새누리의 약속

-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
 - 무료법률지원 확대 : 지원건수 매년 10% 증가
 - 진술전문가 양성 : 2012년 10명 → 2017년 27명 배치
-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 개선 및 의료방문서비스 확대
 - 통합지원센터 확대
 -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
 -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 실시
-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
 -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(현행 4% → 5%)
 - 거주이전 지원 강화

-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한 피해자 간병 및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
-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
- 부대비용 지원 실시
- 한국판 CSI '성범죄 전담반'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지원

새누리의 실천

-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